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00호
2017. 3. 6

정책동향

-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부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제11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시장동향

- 2월 CBSI, 전월 대비 4.2p 상승한 78.9 기록

산업정보

- 자동화와 직업의 미래
- 공동도급 공사, 수급사간 권리·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건설논단

- 조기 大選과 건설정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부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 공공임대에만 치중되어 실효성 의문 -

■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 발표

- 국내 주택시장은 2016년 8.25 대책(가계부채 관리 방안) 및 11.3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여파로 2017년 벽두부터 분양 승인 물량이 1/3로 감소하고 미분양 물량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확연한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정부는 주택경기와 함께 내수 경기도 좀처럼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2017년 2월 23일 발표함.
 - ‘내수 활성화 방안’은 내수 위축 흐름의 조기 차단을 목표로 가계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출 여력을 확대시켜 실제 소비를 이끌어 낸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내수 활성화 방안’ 속에 주택 부문이 포함된 것은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시각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부문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의 주요 내용

-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집중 공급을 통한 전세 가격의 안정으로 가계비 부담을 경감시킴.
 -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2016년은 4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함
 - 2017년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7천호 확대(2.7→3.4만호)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총 12만호(건설임대 7만호, 전세임대 3.4만호, 매입임대 1.6만호) 공급할 계획임.
- 큰 폭의 전세가격 상승지속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전·월세자금 지원을 강화함.
 -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한도를 1천만 원 상향(1.2→1.3억 원, 수도권 국한)하고,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주택도시보증) 한도도 월 10만원 상향(월 30→40만원)함.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하여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함.
 -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에서 취급)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록 보증 취급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강화함.

- 임대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함.

- 공동 거주할 경우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화(수도권 기준으로 현행 호당 0.8억 원 → 2인 1.2억 원, 3인 1.5억 원)하여 셰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을 활성화함.
- 2016년의 제도 개선(계약 체결 기간 7일 → 2일, 서류 간소화)에 이어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에 대한 60만 원 한도의 도배·장판 비용 등 수선비 지원을 확대(1회 → 2회)함.

● 대학생의 주거 개선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

-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 및 대학이 입주자 선정과 입·퇴거 등을 공동 관리함.

● 청년 매입 리츠의 공급을 추진함.

- 청년 리츠의 2017년 주택 매입 계획을 조기 시행(매입 공고 10월→3월, 2천호)하고, 매입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 추진함과 더불어 연중 모집 방식을 통해 시중의 우량 매물을 수시 매입함.

■ 대책의 평가 및 기대 효과

- 전·월세는 주택시장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주택시장 약세 기조 위에서 주택 거래의 활성화 없이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 임대 시장을 위축시켜 내수 활성화에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음.
- 한편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가계생계비 경감만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지원 방안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임.
- 무엇보다 실질 가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가계소득은 2016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현실과 2016년의 각종 부동산 대책 등으로 거래심리 위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 규제의 강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내수 활성화 정책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제11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내수 진작 위해 규제 완화·유망 산업 육성 포괄 -

■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금번 대책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2.1조원+a의 투자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함.
 -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규제 완화와 투자 애로 해소가 절실한 상황임.
 - 금번 투자 활성화 대책은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② 지역 경제 활성화, ③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 여건 개선, ④ 고령사회 유망 산업 육성의 4가지 주요 추진 방향을 선정함.
- 기업의 투자 의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2.1조원 규모의 5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함.
 -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특구 개발은 개발제한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하고 특구 내 기반시설을 지원함.
 - 진도 해양 리조트와 안산 해양 리조트 사업은 군사 시설 및 국유지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임.
 - 여수 경도 해양 레저 리조트 사업은 기반시설 및 세제 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임.
 - 지역 케이블카 확충은 환경 훼손 우려, 비용 부담, 공유수면 점용료 부담 등 사업별 맞춤형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해안 광역관광 지원, 케이블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코자 함. 이를 위하여 통합·연계 개발 유도, 해안 경관 활용, 체감(體感)형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 육성 등을 지원함.
 - 케이블카를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One-stop 승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친환경차 충전소와 휴게 기능을 융합한 복합 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를 구축할 계획임.

■ 생활밀착형 산업 및 고령사회 유망 산업 육성

- 생활밀착형 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산·캠핑 문화 정착 지원, 주차 공유 산업 활성화 유도,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임.
 - 등산·야영 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야영장을 확충하고 대피소, 등산로 등은 정비할 계획임. 야영장 입지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여 입지 제한은 완화할 계획임.
 -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등 공유 주차장의 확대를 도모함.
-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유망한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지원, 장사서비스 규제 완화를 추진함.
 -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60~85㎡ 물량 제한 규정을 예외로 인정함. 공공분양은 우선 배정할 계획임.
 -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코자 함.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할 예정임.
 - 민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왕진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사업 승인·인허가 절차 및 처리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함.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 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 공공법인 등 민간의 자연장지(自然葬地) 조성 투자를 확대를 위해 조성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지 대부분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 투자를 허용함.

■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추가 조치 기대

- 민간투자 유도 및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152개에 달하는 정책 과제가 선정되었으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함. 케이블카 규제 완화(6차), 등산과 캠핑 산업 육성(9차),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사업(10차) 등은 기 선정된 과제로, 과제별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여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큼.
 - 다만, 관광 활성화, 친환경차 육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도로, 입지·건축규제 개선, 장벽 없는 설계(barrier free design) 등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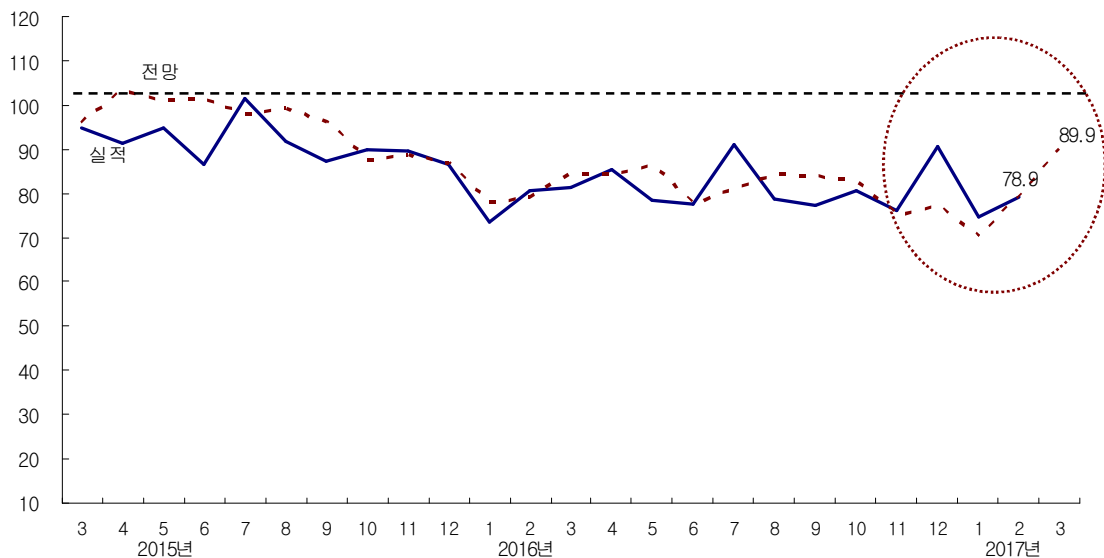
2월 CBSI, 전월 대비 4.2p 상승한 78.9 기록

- 통계적 반등 및 계절적 요인 영향, 대형과 중소기업 지수 상승 -

2월 CBSI 78.9 기록, 건설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부진

- 2017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4.2p 상승한 78.9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에 연초 공사 발주 물량 감소, 주택 부문 체감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2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 15.9p가 하락해 12개월 만에 최저치인 74.7을 기록했다.
 - 2월에는 전월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해 부진했던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통상 1월에 비해 2월에는 CBSI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림 1>과 같이 소폭 상승함.
 - 그러나, 상승 폭이 전월 하락 폭의 1/3 수준에 불과, CBSI 자체도 여전히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에 불과해 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아직 좋지 않은 상황임.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업 규모별로 대형과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과 중소기업의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7.7p 상승한 92.3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6.4p 하락하여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71.0을 기록함. 중견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2.3p 상승한 72.3을 기록하며 1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표 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6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5.6	78.5	77.6	91.0	78.6	77.2	80.7	76.1	90.6	74.7	78.9	79.2	89.9
구 모 별	대형	100.0	83.3	76.9	100.0	100.0	100.0	100.0	84.6	100.0	84.6	92.3	84.6	100.0
	중견	83.8	85.3	90.9	103.0	78.8	76.7	78.8	75.8	90.6	77.4	71.0	80.6	93.5
	중소	70.8	65.2	63.3	66.7	53.2	51.2	60.4	66.7	79.6	60.0	72.3	71.1	73.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년 3월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1.0p 상승한 89.9

- 2017년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1.0p 상승한 89.9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은 건설기업들이 3월에는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2월보다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3월에는 호한기가 지나면서 공사 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CBSI 전망치도 이러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망치가 기준선에 못 미친 8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들은 3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자동화와 직업의 미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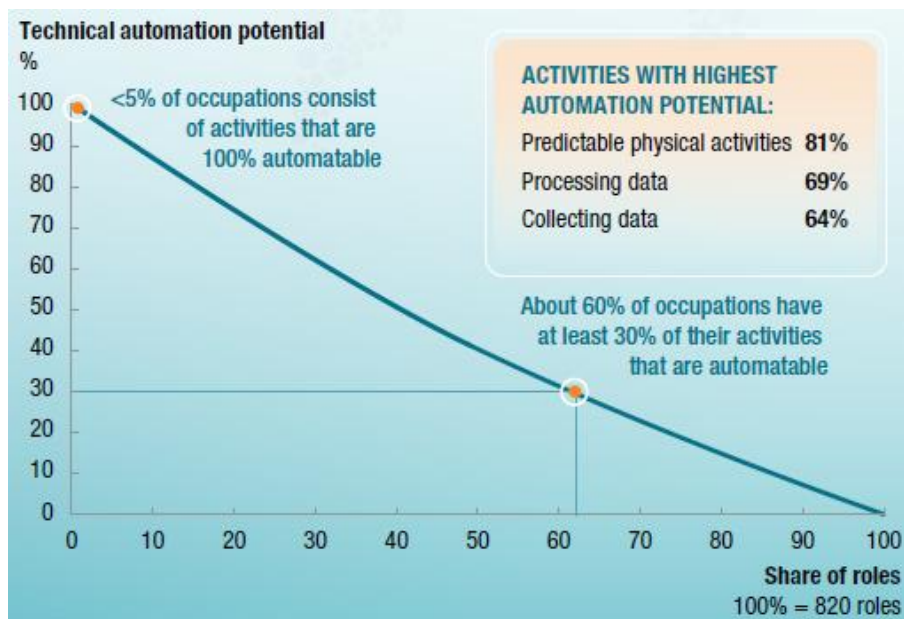
-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농업 등은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

로봇릭스,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의 발전은 새로운 자동화 시대의 도래를 견인

● 산업계가 자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성과 제고와 생산성 향상임.

- 자동화는 오류(error) 저감, 품질 및 속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performance)를 제고하고 생산성(productivity)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 방안임.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화는 세계적으로 연평균 0.8~1.4%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음.
-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은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지만 업무 행위(activities)의 최소 30%는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비중은 60%에 이룸. 특히 예측 가능한 육체노동, 데이터 처리 및 수집 등과 같은 업무는 각각 81%, 69%, 64%가 자동화될 것임(<그림 1> 참조).
- 자동화가 가능한 행위는 고도화되고 예측도가 높은 환경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집중되어 있음. 산업별 자동화 가능성은 숙박 및 요식업(73%), 제조업(60%), 농업(58%) 순이며 건설업은 47%임.

<그림 1>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비중



1)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A Future that Work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산업별로 자동화의 속도와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의 직업을 구성하는 업무 행위의 50%는 2055년까지 완전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동화 시점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음.

■ 직업의 자동화 적용 정도와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5개로 구분

- 직업의 자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인은 기술적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비용(cost of solutions), 노동시장 구조(labor market dynamics), 경제적 혜택(economic benefits),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임.
 - 기술적 가능성 : 특정 작업들을 자동화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통합, 적용이 선결 조건임. 실제 직장에서 활용되는 시점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량 수준에 기계가 도달했을 때임.
 - 비용 : 자동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계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 자동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규모 초기 투자를 수반하게 되는데 관련 비용 감소할 때 자동화는 인간 노동력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경쟁력을 갖게 됨.
 - 노동시장 구조 : 인간 노동력의 질과 양, 공급과 수요, 임금 등은 직업 자동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예를 들면 자동화로 인해 대체된 인력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까지의 시간과 비용 등은 일시적인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발생시키게 됨.
 - 경제적 혜택 : 인건비 절감 외에도 이익 증대,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저감, 품질 향상, 에너지 절감 등은 자동화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노동력 대체 이상의 경제적 혜택들임.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는 관련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안전사고 저감 및 연료 효율성 개선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사회적 수용 : 산업계의 자동화 확대에 따른 이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과 법규적 승인 등과 같은 사회적 수용 정도는 자동화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자동화 수준과 시민들이 갖는 자동화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관련 법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자동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의 변화 범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인력 대체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임.
 - 하지만 세계 경제가 직면한 고령화 및 노동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 노동력의 활용 여부가 핵심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공동도급 공사, 수급사간 권리·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공동도급운영협약’ 등 시공사간 내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인정 -

■ 복잡한 공동도급현장, 수급사간 내부 약정이 매우 중요

- 종합건설기업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은 지역 및 중소건설사의 공사 참여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건설사의 노하우를 집약시켜 시공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
- 그러나 수급사간 시공 기술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업이 쉽지 않고, 효율적인 원가,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별도의 약정을 맺고 1개 사가 대표로 시공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대법원은 2017년 1월 12일자 선고(선고 2014다11574, 11581)를 통해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를 판시하였음.
 - 우선 수급사간 내부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사 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시하였음.
 - 본 사안에서는 대표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공동 수급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내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밝힘.

■ 주요 사실 관계

- A(대표사)와 B사(공동수급사)는 50:50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인이 되었으나 별도의 약정¹⁾을 통해 A사가 대표로 시공을 담당하고 B사는 약정된 수수료를 받기로 함.
 - ‘공동도급운영협약’에 따르면 대표사인 원고가 자금, 기술, 인력과 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를 집행하되, 공동도급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A사가 직원을 선발하여 B사에 입사시킴. A사가 입사시킨 직원의 급여는 B사가 지급하고 기성금 수령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
-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사는 동절기에 건물의 주요부인 본관동 지하 주차장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함. 발주자측은 구조상 안전을 이유로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을 A사와 B사에 지시함.

1) 별도 약정의 정식 명칭은 ‘공동도급운영협약’임. 원심에서는 ‘내부협약’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운영협약’으로 지칭하였음.

- 대표사인 A사는 재시공을 거부하였고, B사는 재시공을 하겠다고 통지함. B사가 재시공을 위해 A사가 타설한 콘크리트 철거하려하자 A사가 이를 막음. B사는 발주처에 대표사인 A사의 공동수급인 탈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 B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 동의를 받고 단독으로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검사를 받음.

■ 주요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만 실효되며, 공사비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인용함.
 - 다른 계약의 경우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나 건축 도급공사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큰 경우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이 경우 이미 진행된 공사비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급인(건설사)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하였음.
 - 위 사례의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기성 금액이 잘못 되지 않았다고 판시함.
- 공동 수급인(건설사)간 내부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간 권리와 의무는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공동도급 공사를 위하여 시공사간에 체결한 공동도급 운영협정 등의 별도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임을 인정한 것임.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는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공동수급인 간 내부 약정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음.
 - 위 사안에서는 B사가 당초 대표사였던 A사의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음.

■ 공동도급 공사에서 시공사간 약정이 유효한 만큼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 공동도급 현장은 공동수급사간 연대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대표사의 시공능력, 자금력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임. 공동 수급사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꼼꼼하고 신중한 ‘내부협약서’ 작성이 요구됨.

이종한(부장 · ljh@cerik.re.kr)

조기 大選과 건설정책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이미 조기 대선(大選) 국면에 접어들었다. 후보들마다 이런저런 공약을 내걸었고,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득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대선 어젠다로 보인다. 후보들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나름의 일자리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신기한 현상이 있다. 신흥국은 물론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11월 말 발표된 영국 정부의 230억파운드(약 33조원)에 달하는 ‘국가생산성 투자펀드’ 구성과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모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 투자 공약은 아직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에 쓸 돈으로 수십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지, 건설업계를 ‘토 건족’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건설 투자를 줄여서 다른 곳에 썼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취업자 수가 무려 180만명이 넘는 건설업계 종사자는 ‘표’로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또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1개의 규제를 신설하려면 2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2월24일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연방정부에 설치하고, 전체 규제의 75% 이상을 완화 내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어젠다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겠다고 한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규제 강화를 공약이랍시고 내걸고 있다. 만약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가 수십만개 늘어나게 된다면 규제는 더 늘어나고 민간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개 규제와 연관된 일이고, 일단 공무원 수를 늘려 놓으면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던 일까지 빼앗아 공공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들마다 ‘4차 산업혁명’을 합창하면서 정작 필요한 규제 개혁에는 눈을 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간 융복합, 업종 간 경계의 와해를 특징으로 한다. 발달된 디지털 기술,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자 한다면 기존의 업역이나 업종 간 규제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 건설산업만 해도 BIM, 3D 프린팅, 드론, 사물인터넷(IoT) 같은 기술들이 스마트시티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할 때 널리 활용되려면 설계·시공·유지관리 업역 간의 규제나 종합·전문건설업 같은 업종 간 장벽 및 각종 인허가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나 정치권에서 건설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엉뚱한 공약을 내건다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건설업계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차기 정부는 대선 후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곧바로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일찍부터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건설경제 3월 2일>